다산포럼

검찰개혁에 덧붙이는 참견

이 종 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인용결정과 함께 어느새 정치공동체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시민들도 다시 익숙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꽤나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의 애간장이 탔지만 전원일치의 결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하니 나름 수긍이 간다.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고 우려했던 불복사태도 없어서 또한 퍽이나 다행스럽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에 행한 결정(97헌마26)에서 달리 판단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애당초 없었을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아쉽다.

1997년에 국회는 당시에도 이미 논란되어온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되거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새로이 정했다. 정권에 영합하는 부당한 검찰권 행사의 대가로 현직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서 곧바로 법무부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다른 공직을 떠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수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으로 결정했다. 조승형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그 금지기간이 고작 2년에 불과하고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뜨악하게 여긴 이가 비단 필자만이 아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어느 원로 헌법학자조차도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검찰개혁을 약속하고서 검찰총장에 오른 이가 검찰권을 무기로 삼아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겁박하고, 그리고 직을 그만두고서 곧바로 야당에 입당하고는 선거에 나서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감사원장도 사직하고서 야당에 입당하여 예비후보로 대통령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현직 검찰총장에게 퇴임 후 2년 동안 다른 공직 취임이나 입당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그리도 지나친 기본권 제한인가? 퇴임 후에 여느 장삼이사(張三李四)들처럼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게 아니다. 고액의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해도 되니 먹고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게 마뜩찮으면 해당 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공익이 고작 2년 동안 다른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사익보다도 못한 것이겠는가?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를 짐작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넓게 보자면 해당 규정이 '초록은 동색(同色)'이듯 같은 법조 식구들의 기득권 제한이니 말이다. 노동3권이나 다른 자유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이나 참정권 제한에는 이렇듯 민감하게 반응하니 이 또한 참으로 생뚱맞다.

1997년에 검찰청법의 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직전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헌정사상 기이한 일은 적어도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비상계엄을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에 벌어진 황당무계한 일들로 인해 국민들이 큰 고초를 겪고 나라의 격이 실추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이 남긴 후과(後果)가 결코 작지가 않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바뀌어서 기소청장이 되든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사정기관(査定機關)의 장(長)들에게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회는 다시 한 번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공직 취임 및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하기를 촉구해본다.

청춘 톡톡

난민 수용, 인도주의·연대감 갖고 따뜻한 시선을

나 승 빈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까지 더해지며 유럽과 중동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기후변화, 분쟁, 경제 불안정 등 복합 위기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며 '난민 수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은 냉담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는 약 12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인정자는 약 1300명 수준으로 인정률은 1%도 되지 않는다. 이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기록된 독일(55%), 캐나다(60%), 프랑스(25%) 등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치로 사실상 난민 수용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에 가깝다.

난민 수용은 시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은 약 1억 1천만 명에 달하며 그 절반 이상이 아동과 여성으로 인간의 존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거치며 유엔과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은 우리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줄 차례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응답을 넘어 우리가 어떤 나라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물론 난민 수용에는 복지 부담, 문화 갈등 등 현실적 우려가 따른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과 정착 지원, 언어·문화적응 교육, 직업 훈련, 주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공청회와 커뮤니티 중심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며 단순 수용이 아니라 '통합'을 설계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와 각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며 통합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통해 난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전환했고, 캐나다는 시민사회가 직접 난민을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정착률을 높였다. 우리도 '공감 기반 난민 정책'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가능성은 이미 확인됐다. 2018년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중 일부는 자립해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도 직업훈련과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적응 중이다. 반면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는 긴 심사 기간과 생계 보장 없는 체류 상태에 놓여 있고 정치권과 언론은 이들을 외면하거나 때론 정치 쟁점화한다. 일부 포퓰리즘 정치인은 국민 정서를 내세워 난민 혐오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벽은 정책 부재뿐 아니라 공감과 이해 부족의 결과다. 많은 국민이 난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틈을 편견과 혐오가 채운다. 따라서 정책은 수용 여부를 넘어서 인식 전환과 공동체적 상상력을 이끌어야 하며 교육·미디어·지역사회가 함께 '공존의 서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더 나아가 난민은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일 수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은 0.7, 고령화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젊고 의지가 강한 난민은 사회의 활력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노동력 보완뿐 아니라 다문화 감수성과 사회적 포용력을 넓히는 자원이 된다. 우리는 '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새롭게 던져야 한다.

난민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태도는 반인륜적이며 우리 과거를 잊는 행위다. 물론 인도주의 명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문을 닫는 것이 해답일 수는 없다. 문을 연다는 것은 곧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는 차가운 방관이 아니라 따뜻하고 신중한 연대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도움을 기억해야 하며 이제는 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고통을 넘어 성숙한 세계시민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자부심이 될 것이다.

기 고

광주, 문화예술 심장이 다시 뛸 때

장 현 우
예술문화기획자

쨍한 햇살 아래, 광주의 거리는 오늘도 고요하다. 오가는 발걸음은 드물고 낡은 상점 간판 위로는 먼지만 쌓여간다. 한때 활기 넘치던 이 도시의 심장이 마치 멈춰 선 시간처럼 느리게 뛰고 있는 건 아닐까? 인구 140만 명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도시의 미래를 향한 경고음처럼 들린다. 광주가 탈산업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물론 광주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착실히 뿌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산업은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산이 제조업 기반의 산업 도시에 머물러 있을 때 광주는 AI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며 미래형 신산업 분야에서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국립시설과 AI를 연계하여 문화도시로 도약하려는 의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체감형 신산업'에 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광주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등등. 역사와 이야기가 깃든 수많은 공간과 행사가 광주 곳곳에 숨 쉬고 있다.

현대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트렌디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광산업을 육성할 잠재력은 차고 넘친다. 광주시가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관광을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심지어 광주 동구에서는 '일상을 여행처럼'이라는 슬로건으로 체류형 예술·관광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이토록 풍부한 자원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공동화는 가속화되는 걸까?

왜 광주의 매력은 도시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걸까? 안타깝게도 우리 도시가 가진 문화예술의 심장은 아직 제 박자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듯하다. 마치 보석을 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광주는 '관심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 국가 운영이 기업형 국가로 자리 잡는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일이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생기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광주가 가진 문화예술의 잠재력을 깨우고 이를 관광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활성화를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관심'을 넘어선 '집중'과 '실행'이 필요하다. 광주만의 고유한 역사와 정신을 담아낸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뻔한 축제나 전시가 아니라 광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비엔날레나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 지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 세계 예술가들이 찾아와 머물며 창작하는 '예술 허브'로 키워나가는 건 어떨까?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광주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AI와 융합된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광주는 '꿀잼도시'를 지향하고 '신경제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AI 기반의 미래 산업과 함께 '체감형 문화예술 관광 산업'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균형 있게 펼쳐야 한다. 텅 비어가는 원도심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광주의 거리에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그날을 위해 지금 바로 광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때이다.

광주는 할 수 있다. 광주가 가진 AI 기술력과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잘 융합한다면 세계 어디 내 놓아도 꿇리지 않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I와 문화예술 관광이 융합되어 도시를 체질 개선하는 방법들은 차고 넘친다. AI 문화예술 관광 플랫폼 구축, AI 기반 문화 콘텐츠 및 인터랙티브 아트 창작, 스마트 관광 인프라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미래형 아트시티 기반으로 '광주 AI-아트 레지던시&연구 허브(GAARH)' 설립, '도시 반응형 AI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도시 광주는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社 說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70주년 맞아 재단 설립

광주일보가 호남예술제 개최 70주년을 맞아 '호남예술제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29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회 호남예술제 시상식에서 호남예술제재단 설립을 공식화 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예술인에게 도약의 발판이 된 호남예술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예술가들을 배출해 왔다"며 "호남예술제재단이 출범하면 예술적 재능을 갖춘 꿈나무들이 세계적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은 최대 100억원을 목표로 확충해 호남예술제가 안정적으로 1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광주일보도 5억원을 출연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는 물론 예술 꿈나무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재단은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관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웬만한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메세나 정신이 없으면 예술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언론사가 예술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례적인 일로 광주일보와 발행인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 꿈나무 발굴해 세계적 예술가로
광주일보 5억 출연 100억 목표로 확충

1952년 창간한 광주일보는 4년 후부터 호남예술제를 창설해 7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했다. 이는 '문화예술 창달'이라는 광주일보의 사시(社是)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척박한 호남에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어린 꿈나무를 발굴해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했다. 광주가 '예향(藝鄕)'이란 확고한 브랜드 네이밍을 갖게 된 것도 호남예술제의 영향이 컸다.

1956년 동방극장에서 열린 제1회 호남예술제는 지방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 결선 날 극장 밖까지 관중들이 장사진을 칠 정도로 시작부터 지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70년을 이어오는 동안 누적 참가자 수가 75만여명에 달할 만큼 명실상부한 전국 대표 종합예술제로 자리잡았다.

호남예술제는 문화예술계 스타 발굴의 산실이기도 했다. 음악계에선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 고 김남윤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발레 스타들을 길러낸 김선희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1세대를 이어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문지영, 파가니니 콩쿠르 3위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는 차세대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이다. 미술계에선 황영성, 최영훈 작가가 있고 문학계에선 고재종·양성우 시인이 호남예술제 출신들이다.

1977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인천 회장이 2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금호문화재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메세나로 자리잡았지만 그룹이 쇠퇴하면서 위상이 약해졌다. 메세나 운동은 이렇듯 운영 주체의 의욕만 가지고는 지탱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호남예술제재단은 광주일보의 출연금을 모태로 뜻있는 기업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열린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씨알을 핵으로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면 눈덩이 굴리듯 출연금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국인 최초 토니상 수상자인 박천휴 작가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인 데 대해 격려하며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K컬처가 힘을 발휘해야 국가가 융성한다는 것이다.

광주일보는 호남예술제를 통해 지역 예술 꿈나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왔다. 이제부터는 호남예술제재단을 통해 지역 예술 꿈나무들이 K컬처의 주역으로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2, 제3의 조성진과 임윤찬이 호남예술제재단의 지원으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다. 호남예술제재단의 출범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無等鼓

잘가 비닐봉지야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사는 12살 소녀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비닐봉지 쓰레기를 주목했다. 서핑을 즐기고 수영과 일광욕을 하던 해변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에 대한 소녀의 문제 의식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2013년, 10살 동생과 환경 단체를 만들게 된다. '바이 바이 플라스틱 백(Bye Bye Plastic Bags·BBPB)'. 해석하자면 '잘가 비닐봉지야' 정도쯤 될 듯하다.

이들은 본격적인 비닐봉투 사용 금지 운동을 벌였다. 기회만 되면 학교에서 문제점을 알리는 설명회·워크숍을 열었고 해변 정화운동을 진행했다. 발리 공항을 찾아 출국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는가 하면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 결국 발리 주지사가 2018년까지 비닐봉지가 없는 발리를 만들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0대 환경운동가 멜라티 위즌의 얘기다. 어린 10대 소녀가 시작한 작은 행동은 학교, 지역사회, 국가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공감하는 세계인들을 중심으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운동 등의 변화로 이어졌다.

스타벅스가 최근 모든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던 정책을 바꿔 플라스틱 빨대(식물 유래)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한 바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23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정책 변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 번 부치면 세상이 뒤집힌다는 부채 '파초선'을 언급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10대 소녀의 미미한 행동이 미래의 큰 방향을 바꾸는데, 파초선을 손에 쥔 이들의 결정은 오죽할까. 힘들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는 환경 정책을 기대하면 안되나.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